

대기업 이번엔 '인력재배치'

한화·쌍용등 관리부서 최고 50%줄여 영업현장 투입

명예퇴직제 이어 새 감원수단 주목

대그룹들이 관리인력의 대대적인 현장 재배치를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명예퇴직제 도입이 주춤해진 가운데 인력 재배치가 재계의 새로운 인력감축 방편으로 본격화하는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관련기사 9면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은 10일 약 1만명에 이르는 생산지원·인사 등 관리부서 인력을 50% 수준으로 줄이라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전면

적인 부서체계 조정 및 인력 재배치 작업에 들어갔다. 김 회장은 그룹 창립 44돌 기념사를 통해 "경쟁력이 없는 업종과 불필요한 조직, 비능률적인 부서, 업무체계는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며 "관리부서의 규모와 인원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과감히 줄여 남는 인력은 모두 생산·영업부서로 재배치하라"고 말했다.

쌍용그룹(회장 김석준)도 이날 '경쟁력 10%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업무 과정 개선을 통해 관리·지원부서 인원을 줄여 영업 및 현장에 배치하는 한편 능력 위주 인사로 인력을 정예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쌍용그룹은 일단 금융 관련 계열사인 투자증권 본사 직원 5백50여명, 화재보험 본사 직원 5백20여명 가운데 20%선을 영업부와 일선 점포 등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또 코오롱그룹은 지난달 관리지원부문 인력의 30%를 생산·영업현장으로 재배치한다는 내용의 불황 대책을 확정하고 계열사별로 구체적인 시행방침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대자동차가 본부 차·과장급 간부를 중심으로 2백~3백명을 과건 형식으로 영업 현장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등 많은 대기업들이 대규모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쌍용투자증권 노조는 "앞으로 추진과정을 보아가며 신중히 대응하겠지만 회사가 이런 인력 재배치를 정리하고 수단으로 악용한다면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혁 기자



헬기이동

10일 오전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민간인 피살자 발견지점 주변에 도착한 군헬기에서 수색군인들이 내리고 있다. 평창/장철규 기자